


| | | |
|---|--|---|
|  | <h1>보도자료</h1> <h2>1.28(목) 14:00부터 보도 가능</h2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 |
|---|--|---|

| | | | | |
|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작성부서 | (금융위원회) 서민금융과, (금융감독원) 서민금융지원국, 저축은행감독국, (자산관리공사) 서민금융총괄부, (은행연합회) 여신제도부, (저축은행중앙회) 경영지원부, (신용회복위원회) 제도기획부 | | | |
| 책임자 | 김기한 서민금융과장 (02-2156-9470) | 담당자 | 김성진 사무관 (02-2156-9471) | |
| |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 (02-3145-8150) | | 전동연 사무관 (02-2156-9480) | |
| | 장병용 저축은행감독국장 (02-3145-6770) | | 성수용 팀장 (02-3145-8130) | |
| | 김동현 서민금융총괄부장 (051-794-3400) | | 정두희 팀장 (02-3145-6774) | |
| | 윤성은 여신제도부장 (02-3705-5704) | | 양동근 팀장 (051-794-3430) | |
| | 조정연 경영지원부장 (02-3978-630) | | 김수연 과장 (02-3705-5224) | |
| 배포일 | 2016.1.27(수) | 배포부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| 총 6매 |

제 목 : 「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」으로서,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.

❶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.

❷ 은행 워크아웃시,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, 이를 구체적인 지원폭과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.

❸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복위·국민행복기금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상향(70%→90%)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➡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·저신용 서민분들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추정

1. 개요

□ '16.1.28일(목),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,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 이용 경험,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,

○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「개인 채무조정 개선방안」의 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함

※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

- 일시/장소 : '16.1.28(목), 14:00~14:50 /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
- 참석범위
 - 금융위원장, 금감원 부원장, 자산관리공사(캠코) 사장, 저축은행중앙회 회장, 국민행복기금 이사장, 미소금융재단 이사장,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, 국민은행장, 신한은행장, 은행연합회 상무
 - (서민금융 이용자) 채무조정 이용자(2인)
- 주요 논의사항 : 「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」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

□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·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“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(금융 접근성 제고)”하는 것과

○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“맞춤형으로 채무조정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

□ 정부는 작년 6월 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」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·금리 인하,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,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,

○ 이번에는 채무자-채권자가 상생(상호 Win-Win)할 수 있도록 “채무조정 제도 개편”에 중점을 둔 “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”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함

□ 특히, 금번 방안은 실직·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었지만,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함

□ 아울러,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'15.8월부터 합동 TF*에 참여하여,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묵묵히 고생한 은행연합회·저축은행중앙회·캠코·신복위, 개별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함

* [참여] 금융위, 금감원, 캠코, 은행연, 저축은행중앙회, 신복위, 개별 금융회사 등

2.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

- ① (신복위 워크아웃)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*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 하되, 이를 위해 현행 **확실적 원금 감면율(50%) 적용 방식**에서 “**탄력적 원금 감면율(30%~60%) 적용 방식**”으로 개선

* 가용소득(월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) 대비 채무원금의 비율

※ 맞춤형 워크아웃 시행시, 평균 원금 감면율이 20.1%→24.6%로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('14년 신복위 워크아웃 대상자에 적용할 경우)

- ② (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*) 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%~60%로 적용

* 현재 공공정보(복지·세무 등)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소득·연령·연체기간에 따라 상환능력을 계량화하는 등 맞춤형 채무조정 실시 중

- ③ (은행·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)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·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평가하여 계량화하고,

○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“맞춤형 지원 시스템” 구축

- ④ (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)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, ‘빚을 내어 빚을 갚는’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

*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로, 대부업 등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,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후에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

○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(통상 2개월)에 자체적으로 “연체 우려 고객*”을 선정하여,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·지원(은행권 공동기준 마련)

* 예시; 대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 고객, 여타 금융회사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등

- ⑤ (취약계층 지원 확대) 신복위·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,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*된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%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,

*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,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

○ 신복위·국민행복기금에 “법률지원단”을 구성·운영하여, 법원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,

※ 이용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(변호사 비용; 150~200만원) 지원 효과

○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장애인, 고령자 등)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 ('16년 중 우선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)

3. 향후 계획

□ 임종룡 위원장은 저소득·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

○ 특히,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(Best Practice)를 공유·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,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

□ 한편, 「서민금융생활지원법」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(대형 대부업체 등), 공·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,

○ 저소득·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

□ 아울러,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,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·취업 활성화 등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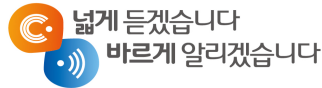
<별첨 1>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 참고자료

<별첨 2> 채무조정 제도개선 주요내용 설명자료

<별첨 3> 효율적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개선방안(관계기관 합동)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참 고

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기대효과 (추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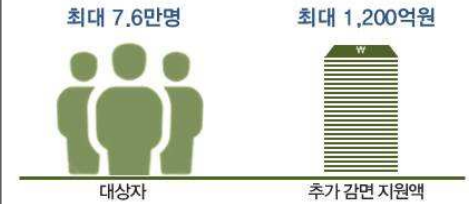
▶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·저신용 서민층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

1. 신복위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



● 연 약 6만명('14년 수준) 채무조정 추진시

2. 국민행복기금 맞춤형 지원·관리 강화



● 최대 원금 감면율 50%→60% 증가시 (연 약 11만명 채무조정 약정 체결시)

3. 금융권 채무조정 신속·체계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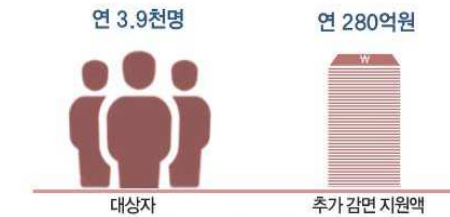
● '13~'14년 평균 채무조정 실적과 비교

4. 은행권 공동 '신용대출119' 도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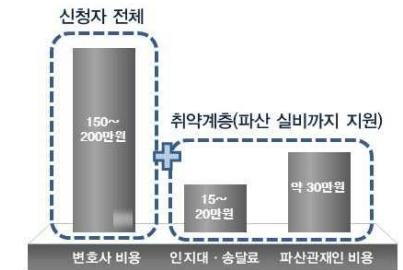
● 5.3만명의 연체 예방 효과

5. 취약계층 감면을 확대



● 신복위,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대상으로 산정

6. 신복위·행복기금 법률지원단 설치



● 비용절감 효과 : 1인당 최대 총 250만원 절감 가능